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우려 최소화”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서
“주 52시간 근무제
현장 혼란 우려
합리적 조정 불가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책 시행 과정에 국민들께서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해의 굵은 정책방향은 연내에 세워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정책으로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을 꼽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찾아내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의를 다해 설명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그는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중독사고가 잇따랐다”며 “각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다르지만 그 배경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 안전관리 규정은 (환경을) 쫓아가

지 못하고,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며, 사후 대응이 허술한 것이 공통된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새해 초에 다시 점검하겠다. 관련 부처들은 업무보고와 별도로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에서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외교부는 사태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국민)에 대해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쓰나미 피해 수습과 복구를 도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

軍 복무 중 과중한 업무 자살 원인… 보훈 보상자 인정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4일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 복무자도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인 경우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을 때만 인정받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등록요건 기준과 등록신청 대상 유족범위 확대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장애인 등급제 내년 7월 폐지… 수요 따라 맞춤형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6등급—중증·경증 정도만 구분
의학적 장애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해 온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사라진다.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하고 수급자격과 급여량 등은 종합조사를 통해 실제 필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들은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구분돼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받

급받을 필요는 없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된 등급을 부여하고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정도로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 해당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내걸었음에도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건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해온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애,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 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서비스는 기존 등급 대신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등급이 낮아 신청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내년 7월 이들 4개 분야를 시작으로 종합조사는 2020년 장애인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으로 차례로 확대된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공인한 ‘장애인 맞춤형 전담체계 구축’ 추진 방침도 분명히 했다. /뉴스

이춘석 의원 홀로그램사업 과기부 통과 ‘결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총 사업비 4천 억 규모로 추진되는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동 사업은 최근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홀로그램에 대해 연구개발과 실증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867억, 민자 808억 등을 투입해 상용차 인포테인먼트, 문화재 재현, 홀로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기술성 평가 통과에 이 의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작년부터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뤄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직접 면담하는 등 주무부처

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온 결과이다. 더욱이 이 의원은 이미 내년도 국가예산에 300억 규모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반영시킨 바 있어 전북이 홀로그램 분야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이다. 홀로그램은 세계시장이 연평균 14%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2025년 3조 2천 억 규모가 예상되고 있어 전북의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동 사업은 사업성 평가 등 다음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예타조사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북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홀로그램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예타 최종통과는 물론이고 신속한 국비 반영을 위해 앞으로도 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딸 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검찰 고발

민중당, “검찰수사 외에는 의혹 규명 방법 없어”

민중당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중당은 지난 24일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전 원내대표는 딸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정치공작’이라며 음모론을 주장했지만 국정조사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제를 들먹이며 오히려 정치적 불타기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 가능성이 사라졌고 검찰수사 외에는 의혹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 김 전 원내대표 딸 특혜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공작을 주장하면서도 처음에 KT 스폰서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뒤가 구린 것”이라며 “KT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KT 워선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강원랜드 부정 채용이 불거지자마자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퇴사했다고 하니, 우연이라고 보기에 석연치 않다”며 “아니 뎀 굴뚝에 연기 날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의 딸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폰서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신분 전환 후 올해 2월 퇴사했고, 당시 KT는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김씨를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채용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민중당이나 정의당, 평화당이 정말로 국정조사에 나설 의향이 있다면 김성태 딸-문준용 동시국조”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